

사회운동으로서의 포스트식민주의 : 프랑스의 “공화국의 원주민들” 을 중심으로

김태수(한국외대)

2005년의 프랑스는 1월의 ‘공화국의 원주민 운동’의 출범, 식민지배의 ‘긍정적 역할’을 명시한 ‘2월 23일 법’ 제정, 그리고 늦가을에 교외지역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소요사태를 겪으면서 “포스트식민의 해”로 기록되었다. 이 해를 기점으로 오랫동안 잊혀던 프랑스의 식민과거는 포스트식민 담론과 함께 다시 프랑스 공론장의 무대 전면으로 되돌아왔다. 이 글에서는 공화국의 원주민운동(MIR)을 중심으로 프랑스에서 포스트식민을 둘러싼 논쟁과 이의 정치적·사회적 맥락을 재구성한다. 구체적으로는 원주민운동이 대동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주민 청년운동영역의 성립과 분화과정 속에서, 상황적 맥락은 9·11 테러이후 프랑스 사회에 만연된 이슬람 혐오 분위기를 통해 파악하고 원주민 운동 발족 직후에 표출된 프랑스 언론, 정치세력 및 시민단체의 반응을 살핀다. 또한 프랑스에서 포스트식민 관점이 이주민 운동이념으로 부상되는 사회적 맥락과 포스트식민 학술담론이 운동담론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원주민 운동의 활동방식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는 원주민 운동의 한계를 지적하고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포스트식민 운동”이 프랑스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살핀다.

주제어: 프랑스, 공화국의 원주민들, 포스트식민주의, 사회운동, 식민과거

1. 식민과거의 현재성과 포스트식민¹⁾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영국과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식민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프랑스는 2차 대전 이후 점차적으로 탈식민지화를 거치면서 1960년대 초에 이르러 대부분의 식민지에 독립을 부여하였다. 탈식민 과정은 베트남과 알제리의 경우를 제외하면 비교적 순탄하게 이루어졌다. 프랑스는 1954년 디엔비엔푸(Dien Bien Phu) 전투에서 호찌민이 이끄는 베트남 군에 패배하면서 인도차이나를 잃었으며 이어 알제리에서 발생한 8년간의 전쟁 끝에 1962년, 알제리 민족해방전선(FLN)과 예비양 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을 종식하고 알제리의 독립을 허용하였다. 특히 참혹했던²⁾ 알제리의 독립과정은 종전선언 직후 100만 명에 달하는 알제리 거주 프랑스 본국인(피에누아, Pieds-noirs)의 야반도주와 같은 송환, 그리고 아르키(harkis)³⁾에 대한 FLN의 대대적인 보복학살, 등의 비극이 덧붙여져서 전쟁 이후에도 양측에 크나 큰 상흔을 남겼다.

알제리 전쟁 이후 프랑스 정부는 식민과거에 대해서 철저히 망각하는 자세를 취했다. 식민지배와 관련된 과거의 아픔을 잊고 경제발전, 유럽연합 건설, 제3세계와의 연대, 개발협력,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자국민이나 프랑스의 (구)식민지를 향해 제안하는 것이 드골 대통령 이래로 프랑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중의 무관심과 정치권 및 주류 언론의 침묵 속에서 1990년대부터 점차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움직임은

1) 국내학계에서 이미 “포스트식민주의(post-colonialism)”이란 낱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접두사 ‘post’를 “후기” 혹은 “탈”로 구태여 번역하지 않고 “포스트식민”으로 사용한다.

2) 이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는 30만 명(프랑스 측 주장)에서 백만 명(알제리 측 주장)에 이르며 희생자 대부분은 알제리 인이었다.

3) 알제리 전쟁 당시 프랑스 군에 협력한 알제리인 부역자들.

크게 두 지점에서 관찰되었다. 우선 프랑스 근·현대사학계 내부에서 일부 학자들이 식민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프랑스의 식민지배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시도는 물론 철저하게 학문연구의 테두리 안에서 실천되었지만 이들 연구계획이 맞닿는 사회적 메시지는 식민과거에 대한 프랑스의 반성과 속죄로 연결되어있어 분명 엄청난 정치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식민과거의 영광을 기념하는 움직임도 알제리 귀국동포 단체들이 주로 활동하는 남부 프랑스의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었다.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식민과거에 대한 기억 살리기 기획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프랑스 사회는 본격적으로 포스트식민 논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우선 영·미 인문학계에서 유행하는 포스트식민 연구(Postcolonial Studies)의 다문화주의 관점이 일부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도입되면서 식민과거는 이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수준을 넘어 현재 프랑스 사회의 모순을 해석하고 프랑스 고유의 공화주의 정치이념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들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와 공화주의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한편, 식민지 출신 이주민들이 프랑스 사회에서 겪는 차별⁵⁾의 원형을 식민 시절 공화국의 대 원주민 정책에서 찾았다. 다른 한편, 알제리 귀국동포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알제리 프랑세즈(프랑스의 알제리)” 기념사업은 일부 지역 정치인 및 지자체장들의 협조를 얻어 점차 변창하면서 식민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려는 움직임도 더욱 대담해졌다. 2001년

4) 1980년 6월 14일, 툴롱(Toulon)시는 “알제리 프랑세즈를 위한 순교자들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고 “프랑스가 제국을 보존하기를 원했던 자들”을 찬양했다. 특히 “피에누아 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Alpes-Maritimes, Hérault, Bouches-du-Rhône, Lot-et-Garonne, Var 등이다.

5) 실상 북아프리카(특히 알제리) 출신 이주민들이 프랑스의 (구)식민지 출신 이주민들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이 프랑스 사회에서 겪는 차별의 실태와 프랑스 사회로부터 배제된 현상에 대한 설명과 분석은 (박단 2013) 참조.

3월 3일, 툴롱(Toulon)시는 알제리 전쟁당시 알제리 주둔군 사령관이자 비밀군사조직(OAS)⁶⁾의 최고 책임자로 군사반란을 주도하고 드골 암살을 기도한 죄로 군사법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장군을 기리는 ‘살랑장군 사거리(Carrefour Général Salan)’ 명명식을 갖고 현판을 설치하였다. 또한 마리냐느(Marignane, Bouches-du-Rhône)시의 공동묘지에 “알제리 프랑세즈를 위해 목숨을 바친 병사들을 위해서”라는 글귀와 함께 3명의 총살된 OAS 대원의 이름이 금으로 새겨진 기념비가 2005년 7월 6일에 세워졌다. 이 기념비 제막식에는 국민전선(Front National, 극우정당) 소속 중진 정치인들이 수천 명의 참석자 맨 앞줄에 참석했다. 2005년 2월 23일, 프랑스의 식민지배⁷⁾의 “긍정적 역할”을 명시한 조항이 포함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만 하더라도 식민과거의 영광을 기리는 이와 같은 기념행사들은 그저 남불(南佛)의 중소도시에서 거행된 사소한 사건들로 치부될 수도 있었다.⁸⁾ “귀국동포에 대한 국가의 인정과 보상에 관한 2005년 2월 23일 법”⁹⁾(통칭 “2005년 2월 23일 법”)이란 명칭 아래 13개의 관련 조항으로 구성된 이법은 제1조에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인도차이나를 비롯해 한 때 프랑스의 주권 아래 놓였던 지역에서 프랑스가 이룩한 업적에 기여한 남성과 여성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표한다”는 법 제정의 취지를

6) OAS는 알제리의 독립을 거부하는 진영이 1961년에 설립한 비밀결사 조직으로 알제리 주둔군 사령관 살랑(Raoul Salan) 장군이 지휘하였다. 드골 대통령의 알제리 정책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면서 이 조직은 알제리와 프랑스에서 많은 테러공격과 살인 범죄를 범했다.

7) 원문에서는 “해외에서의 프랑스의 존재(la présence française outre-mer)”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되어있다.

8) “마리냐느 기념비 사건”에 대한 대부분의 논평가들은 2005년 2월 23일 법의 제정과 OAS 기념사업 단체들의 최근 적극적인 행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실상이 법의 13조는 실행을 받았다가 사면된 OAS 대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9) “Loi du 23 février 2005 portant reconnaissance de la nation et contribution nationale en faveur des Français rapatriés,” *Journal Officiel* du 24 février 2005.

밝혔다. 특히 이 법의 4조 2항에 명시된 “학교교과 과정은 해외, 특히 북아프리카에서 프랑스가 수행한 긍정적인 역할을 무엇보다도 인정하며”라는 문구가 큰 논란을 일으키며 역사학계를 비롯하여 지식인과 시민단체들의 거친 비판을 야기하였다.¹⁰⁾

한편, 이 법안이 제정되기 약 한 달 전에 인터넷에 공개된 “공화국 원주민들의 호소문(Appel des indigènes de la République)¹¹⁾”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프랑스 사회를 포스트식민 논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우리는 공화국의 원주민이다!”라는 외침으로 시작되는 이 호소문은 많은 운동단체들과 6천명의 온라인 지지 서명을 순식간에 이끌어내었다. 이 호소문에서 자칭 “원주민들”은 “취업, 주거, 보건, 학교, 여가생활에서 차별받는 (구)식민지 출신 [이주민]들은 사회적 배제와 고용 불안정의 일차적인 희생자들”이며 “프랑스는 여전히 식민국가”이고 “공화국의 탈식민화는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하였다. 이들은 프랑스가 자처하는 “평등의 공화국은 신화에 불과”하며 프랑스는 “자신의 식민 과거-현재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1945년 5월 8일, 프랑스가 나치로 부터 해방된 바로 그날 프랑스는 알제리에서 피식민 민중에 대한 전례가 없는 학살을 자행했음을 상기하면서 다가오는 “5월 8일, 이 학살의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공화국 원주민들이 준비한 최초의 시가행진으로

10) ‘2005년 2월 23일 법’을 둘러싼 논쟁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이슈에 집중되었다. 첫째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배에 대한 정치적·윤리적 평가로서 긍정론(우파)과 비판론(좌파)의 대립구도로 나타났으며, 둘째는 ‘과거사’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입장을 교과과정에 강요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이 이슈는 이 법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집단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김용우 2012) 이듬해 1월 25일, 시락 대통령은 내각에게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법의 4조 2항을 헌법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헌법위원회는 이 조항의 폐지를 결정하였다.

11) 원 제목은 “포스트식민적 반식민 운동의 시작을 위한 호소문 (Appel pour des Assises de l’anti-colonialisme post-colonial)”이다. 이 호소문의 전문(번역본)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식민 투쟁을 이어나가자”라는 문장으로 호소문을 끝맺었다. 이어서 같은 해 11월에 대도시 인근 이주민 밀집거주 지역(방리우, Banlieue)에서 발생한 대규모 소요사태는 프랑스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포스트식민 관점으로 바라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폭동은 식민지 출신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공화국을 ‘벌거벗긴’ 사건으로 규정되었다.(Guénif-Souilamas 2006)

1월의 공화국의 원주민 운동(Mouvement des indigènes de la République, 이하 MIR로 표기)의 출범, ‘2월 23일 법’ 제정, 그리고 그 해 늦가을에 교외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소요사태로 정점을 찍은 2005년을 혹자는 “포스트식민의 해”로 칭할 정도로 이 해를 기점으로 프랑스 사회에서는 포스트식민과 관련된 단행본, 논문, 논평 및 번역서의 출간이 붐을 이루고 오랫동안 잊혔던 프랑스의 식민과거는 포스트식민과 함께 다시 프랑스 공론장의 무대 전면으로 되돌아왔다.(Cohen 2007) 2005년 프랑스 사회를 뒤흔들었던 위의 3개의 사건 중에서 방리우 소요사태 및 “2005년 2월 23일 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가 국내 학계에서 진행되었다.¹²⁾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학문적으로 조명된 바 없는 공화국의 원주민운동(MIR)을 소개하면서 이 운동을 중심으로 프랑스에서 포스트식민을 둘러싼 논쟁과 이의 정치적·사회적 맥락을 재구성할 것이다. 우선 원주민운동이 태동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주민 청년운동” 영역의 성립과 분화과정 속에서, 상황적 맥락은 9·11 테러이후 프랑스 사회에 만연된 “이슬람 혐오” 분위기를 통해 파악하고 원주민 운동 발족 직후에 표출된 프랑스 언론, 정치세력 및 시민단체의 반응을 살핀 다음(II장), III장에서는 프랑스에서 포스트식민 관점이 이주민 운동이념으로

¹²⁾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에 대한 연구는 (박단 2006; 엄한진 2007), 그리고 “2005년 2월 23일 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연구는 (김용우 2012) 참조.

부상되는 사회적 맥락과 포스트식민 학술담론이 운동담론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원주민 운동의 활동방식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원주민 운동의 한계를 지적하고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포스트식민 운동”이 프랑스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할 예정이다.

2. 원주민 운동의 기원과 시대적 맥락

원주민 운동이 태동된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랑스에서 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성립된 이주민 청년운동의 역사를 고찰하고 이 운동권의 구조와 내부 경쟁관계 속에서 원주민 운동의 성격과 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이주민 청년운동의 성립과 분화

프랑스의 이주민 청년운동은 1970년대 중반, 석유파동과 함께 불경기가 시작되면서 프랑스가 노동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족초청 이민만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새롭게 조성된 이주 환경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때 프랑스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본 방침이 ‘일시적 체류’에서 이들 가족의 정주를 허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로 프랑스 땅에는 영구적인 정착을 하게 된 이민 2세대들이 급증하였다. 당시 프랑스에 유입된 이주민 대부분은 북아프리카 출신(특히 알제리 출신)이었으며 70년대 이들 중 일부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폭력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였다.¹³⁾ 또한 80년대

13) 특히 1973년은 아랍계 이주민에 대한 집단 폭력행위(ratonnades)로 점철된 해로 프랑스 영토에서 인종 간(백인/아랍인) 물리적 충돌을 염려할 정도였다. 이 충돌은 특히 남부 지방에 집중되었다.(6월의 그라스(Grasse) 사건, 7-8월의 마르세유(Marseille), 특

에 들어서면서 프랑스 정치권에는 외국인 혐오와 반-이민 담론을 주도하는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ront National, FN)이 출현하여 점차적으로 세를 불려나가면서 반-이주민 정서를 정치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기 시작하였다.¹⁴⁾

한편 대도시 인근에 조성된 일부 서민임대주택 단지에 (북)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가정이 집중하게 되고 이 지역의 비행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그중 일부는 경찰병력과 충돌하여 소요사태로 발전하였다.¹⁵⁾ 1983년 여름에도 리옹 외곽 베니시외(Vénissieux)에서 아랍계 청소년들과 진압경찰 간에 충돌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리우에 거주하는 일부 아랍계 청년들은 “평등과 반인종주의를 위한 행진(La Marche pour l'égalité et contre le racisme)”을 조직하여 공권력과의 폭력적인 대결국면을 해소하려하였다. 1983년 10월 15일, “무기를 내려놔요, 우리가 갑니다!(Rengainez, on arrive!)”라는 평화 메시지를 내걸고 열 명 남짓의 아랍계 청년들이 마르세유에서 파리까지 긴 여정의 도보행진을 시작하였다. 대중의 무관심 속에서 행진을 시작했지만 12월 3일 파리에 도착할 때에는 10만 명으로 불어난 군중이 이들을 맞이하였다. 방리우에 갇혀 지내는 이민출신 청소년들의 집단적인 고립상태를 벗어나 빈곤지역과 외부와의 다리를 놓으려는 취지로 기획된 이 행진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문제아”로 낙

히 마르세유 주재 알제리 영사관을 겨냥한 백색 테러, 등). 프랑스 주재 알제리 대사관에 의하면 폭력사태로 인해 1973년 동안 알제리인 50명이 사망하고 300명이 부상당했다.

14) 국민전선은 1983년 지방선거(특히 드뤼 Dreux 기초의회 보궐선거)에서 최초로 4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면서 제도 정치권에 입성하였다.

15) 1971년 리옹시 외곽 보-앙-블랭(Vaulx-en-Velin)에서 최초로 “사건”이 지역 언론에 보도된 이후, 1976년에는 빌르르반(리옹시 외곽)에서 청소년들이 훔친 승용차를 집단 난폭 운전(rodéos)을 하고 승용차를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1979년에는 보-앙-블랭에서 처음으로 지역 청소년들과 경찰 간의 충돌이 벌어졌다. 1981년에 리옹시 외곽 멩게트(Minguettes)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한 폭동은 처음으로 중앙언론에 보도되어 전국적인 조명을 받았다.

인찍힌 북아프리카 출신 청소년들이 프랑스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벌린 화해의 몸짓과 평화로운 모습은 당시 언론과 집권 사회당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선했다. 미테랑 대통령은 이 행진을 주도한 청년들을 엘리제궁에 초대하여 10년 만기 체류증과 반인종차별 법 제정, 그리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약속했다. 일간지 리베라시옹(Libération)에 의해 “뵈르(Beurs)들의 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이 국토행진을 계기로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주민 청년운동의 공간이 새롭게 구성되었다. 이 행진은 구식민지 출신 이주민 후속세대가 처음으로 프랑스 공론장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각인되었다. 이전에만 하더라도 북아프리카 출신들의 프랑스 이주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었으며 프랑스 땅에 정주하기 보다는 일이 끝나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독신 남성 노동이민자의 이미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북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여성과 자녀의 존재는 상대적으로 파묻혀져 있었다.(Hajjat 2013, 151) “국토행진” 운동은 이듬해에도, 그리고 2년 후에도 조직되었다.

다음 해에는 “수렴 84(Convergence 84)”라는 이름의 두 번째 행진이 조직되었다. 이번에는 도보가 아니라 스쿠터를 타는 행진이었다. 이 행진에서는 “프랑스는 스쿠터와 같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모두 섞여야한다”는 슬로건과 함께 프랑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제시하였다. “수렴행진”을 주도한 청년들이 향후 운동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운동의 독자성(autonomie)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운동을 순전히 북아프리카 이민 후속세대 청년운동으로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이주민 운동 혹은 청년운동으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내부 노선투쟁이 격화되었다. 소위 “가부장제”¹⁶⁾를 배격하고 운동의 자주성과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공동체파(communautaires)”와 여타 진보 운동단체와의 적극적

인 연대와 교류를 주장하는 “간문화파(interculturalistes)”가 대립하게 되고 이 논쟁에서 전자의 입장이 주류를 형성하면서 공동체적 노선(독자노선)이 채택되었다. “공동체파” 혹은 “자주파”가 이듬해 독자적으로 조직한 3번째 행진에 “불일치 85(Divergence 85)”라는 명칭이 사후에 붙여질 정도로 이 운동은 이내 극심한 내분에 휩싸였다. 이후 “공동체파” 마저도 팔레스타인 문제에 몰두하는 집단, 성찰모임, 혹은 현장운동에 몰두하는 집단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대부분 대중적 시선에서 사라졌다. 특히 후자는 이주민들을 정치적으로 도구화한다고 믿는 전국단위 연합체 조직이나 정당을 경계하고 현장중심의 이주민 지역운동에 몰두하는 독자노선을 취하였다.

이주민 청년운동이 내분을 거쳐 그 일부가 지역운동에 몰입한 사이 “행진”을 계기로 열린 전국적인 운동공간은 주류언론의 대대적인 관심을 받으며 반인종차별을 운동이념으로 내세우고 1984년에 창립된 “SOS 인종차별(SOS Racisme)”이라는 조직에 의해 신속히 전유되었다. SOS 인종차별은 특정 지역 이주민운동이나 방리우 지역운동과 차별된 노선을 견지하고 집권 사회당과 협력에 주안점을 두면서 당시 세를 불리는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에 대항하는 정치투쟁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이르는 시점에서 이 반인종차별 단체는 급격히 쇠퇴하였다. 이 단체는 1988년 대선에서 미테랑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였으나 선거 이후 집권 사회당은 이 단체의 요구에 등을 돌렸으며 줄리앙 드레이(Julien Dray) 같은 이 조직의 일부 리더만이 사회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후 일부 운동원들은 사회당과의 결별을 주장하면서 이탈하였다. 한편, 1990년대 초부터 무슬림 종교조직들

16) “가부장제(paternalisme)”는 “자주(autonomie)”를 표방하는 소규모 운동권의 용어로 진보적 전국단위 운동조직이나 정당(인종차별단체, 사회당)들이 이주민 청년운동을 반인종주의 이슈와 반 국민전선 투쟁에 종속시켜 평등이슈와 같은 이주민 고유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 이주자 밀집지역에 터를 잡고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면서 일부 청년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경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지역 (북)아프리카 이주민 2세 청소년들이 이슬람으로 회귀하는 현상의 이면에는 이들에게 우울한 미래(실업과 불완전 고용)만을 보장하는 기존의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감의 상실, 그리고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공화주의 이상과 가치들, 특히 비종교적 보편주의에 대한 이들의 점증하는 불신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1990년대부터 이주민 운동영역은 3개의 축으로 구조화되었다. 첫째 축은 SOS 인종차별, “반인종주의와 민중들의 우애를 위한 운동(MRAP)”¹⁷⁾, “라르프롱(Ras le front)” 등의 반인종주의 운동단체들로 구성되었으며 둘째 축은 이슬람 운동조직(이슬람 근본주의 조직에서부터 사회문제에 집중하는 온건 이슬람운동 조직으로 분화되었다), 그리고 셋째 축은 현장운동노선에 집착하고 외부 운동권과의 연대와 소통에 소극적인 “공동체파” 운동권으로 구조화되었다. 1990년에 들어서며 뿔뿔이 흩어져있던 “공동체파” 지역운동원들은 우여곡절 끝에 불법 체류자에 대한 프랑스 당국의 2중 처벌(감옥+추방) 반대운동 이슈를 중심으로 1995년 “이민과 방리우운동(Mouvement de l’immigration et des banlieues, MIB)”이라는 전국단위 연합체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내부 결속력은 문제가 있었으며 통합은 불완전하였다.

위의 운동영역의 구도에서 볼 때, “공화국의 원주민” 운동을 기획하거나 이 운동에 지지를 표명한 개인 혹은 단체들은 지난 20년 동안 형성된 여러 갈래의 운동 이념과 노선의 교차점에 있다.¹⁸⁾ 구체적으로는

17) ‘반인종주의와 민중들의 우애를 위한 운동(Le Mouvement contre le racisme et pour l’amitié entre les peuples, MRAP)’은 1949년 대독 레지스탕스 출신으로 나치에 의해 강제수용의 희생자들이 만든 반인종주의 운동 단체이며 “모든 시간간의 권리의 평등”을 운동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 단체는 현재 이주자 권리운동과 반인종주의 운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슬람혐오를 반유대주의와 마찬가지로 인종주의의 한 형태로 판단하고 있다.

18) 호소문의 서명자들은 “주도자” 리스트와 “지지자”리스트로 구분되어 있다. “주도자”

1) “공동체주의” 이주민 운동권, 2) 진보적 제3세계 운동권 특정 분파, 3) 팔레스타인 지지운동세력, 4) “희잡 금지법”에 반대하며 “포스트 식민 여성운동”을 표방하는 여성단체 “레블레다르드(Les Blédardes)”¹⁹⁾, 5) “진보적 무슬림 단체” 프랑스무슬림 연합(Collectif des musulmans de France, CMF)²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주민 운동이 위와 같이 매우 다양한 구성인자의 모임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앞서 밝힌 대립구도에서 SOS 인종차별에 대한 불신은 특히 뿌리가 깊다. 부아마마는 1980년대 초 “행진” 시절부터 이미 식민지 출신 청년과 SOS 인종차별로 대표되는 외부의 지원세력간의 모순이 내정되어 있었다고 지적한다. “당시 SOS 인종차별은 행진을 계기로 태동한 이주민 청년운동을 관용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 북부 이주민독자운동(Mouvement autonome de l'immigration du Nord, MAI 59), 프랑스 무슬림연합(Collectif des musulmans de France, CMF), Oumma.com, 아프리카 실천연구모임(Groupe de recherches activistes sur l'Afrique, GRAAF), 프랑스 여성무슬림 권리(Droits des femmes musulmanes de France), 말은 중요하다(Les Mots sont importants, LMSI), 인종주의 법에 반대하는 영원한 축제(Festival permanent contre les lois racistes Strasbourg), 모두평등함 온라인단체(TouTEsEgaux.net), 여성운동단체 ‘레블레다르드’(collectif féministe Les Blédardes), 디베르시테(DiverCité, Lyon), 프랑스 마그레브노동자협회(Association des travailleurs maghrebins de France, ATMF), ‘라튀외르’ 랩그룹(groupe de rap La Rumeur), 재블아프리카 학생·노동자협회(Fédération des étudiants et travailleurs d'Afrique en France, FETAF).

19) 이 단체는 공화주의를 표방한 이주민 여성단체 “창녀도 순종녀도 아님(Ni putes ni soumises, NPNS)”의 운동노선에 반대하며 2004년에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NPNS가 제도 좌파와의 불평등한 동맹의 오류를 되풀이 할 뿐 아니라 “페닉에 빠진 지배계급”을 위해 성차별적이고 이슬람혐오적인 식민주의 인식에 새로운 이념적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비난하였다.

20) 1992년에 설립된 프랑스 무슬림 청년단체 연합이 이 단체의 전신이다. 이후 발전을 거쳐 2000년대에는 신자유주의 반대 대안세계화 운동에 참여하며 진보적 무슬림 단체를 표방하고 있다(2004년 런던에서 개최된 유럽사회포럼 참가, 2006년 마그레브 사회포럼 참가, 2007년, 프랑스 Saint Denis에서 열린 빈민지역사회포럼 참가(Forum Social des Quartiers Populaires à Saint Denis)등. 이 단체는 특히 제네바 태생 이슬람 신학자 타릭 라마당(Tariq Ramadan)과 연결되어있다. 프랑스 언론과 일부 진보지식인들은 그를 “진보를 위장한 이슬람주의자”로 간주하고 배격하고 있다.

과 추상적인 반인종주의 담론을 앞세워 FN에 맞서는 방패막이로 유도하였으며 [...] 권력에 오른 좌파는 의도적으로 식민지 출신 청년들의 정당한 요구의 정치적 표명을 막는데 급급하였다”고 그는 부연했다.(Bouamama 2005) “원주민 운동”의 이론가 중 하나인 키아리 또한 “백인의 정치플랜”에 참여한 SOS 인종차별을 비난하고 “좌파가 원주민들의 불가피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첫 번째 적”이라고 설명했다.(Khiari 2006) 이와 같이 원주민 운동 리더들의 말에서 확인되는 SOS 인종차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는 원주민 운동을 이주민 청년운동영역에서 후자가 점유하고 있던 지배적인 위상에 대한 도전자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이슬람 혐오(islamophobie)에 대한 대응

원주민운동에 가담한 단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희잡 논쟁”을 기점으로 공화주의 가치와 비종교성(라이시테 *laïcité*)의 명분을 내세우고 프랑스 주류 언론과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이슬람 때리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이다. 2001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는 아랍계가 대부분인 프랑스의 이주민 사회에게 새로운 국면을 안겨다 주었다. 특히 프랑스에서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급속히 퍼지면서 반인종주의-이주자 운동권 내에서 이슬람주의에 대한 관점을 둘러싸고 두개의 진영으로 나뉘게 되었다. 한쪽은 라이시테의 원칙을 고수하고 이슬람주의를 공개적으로 배격하고 “반테러 동맹”에 가입한 반면, 다른 쪽은 9·11테러 이후 만연한 이슬람에 대한 경계와 불신 풍조를 이슬람 혐오 인종주의로 간주하고²¹⁾

21) ‘이슬람혐오증’을 보는 관점을 둘러싸고 반인종주의 시민단체들마저 서로 대립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연대(*la Ligue internationale contre le racisme et l'antisémitisme, Licra*)’는 이 용어 자체를 거부하는 반면, 반인종주

이에 맞서 적극적으로 싸워야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대립 국면에서 후자의 입장에 선 “공화국의 원주민들”은 식민출신 이주민들이 이제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공격받고 있으며 현재의 상황을 “존중받는 인종주의(racisme respectable)의 출현”으로 진단한다.

“그리고 9•11 테러가 일어났고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 [우리를 보는 눈이] 아랍, 북아프리카 이주민에서.. 무슬림으로..[변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이기도 하다. 어쨌든, 이런 변화를 통해서 프랑스에서 ”존중받는 인종주의“가 태어났다. 반아랍 인종주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최소한 내놓고는.. 그런데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명분으로 이슬람혐오가 생겨났다. 이후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이슬람혐오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후리아 부텔자)²²⁾

“공화국의 원주민들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운동이 구체화되었다. ‘희잡 금지법’을 계기로 일어난 논란이 중요한 순간이었다. 원주민 운동에 동참한 모든 이들은 이미 ‘모든 소녀/소년을 위한 학교’(le Collectif une école pour toutes et tous)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희잡 금지법’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이 단체를 희잡 착용에 찬성하는 모임이라고 사람들이 말했지만 회원의 90%는 무종교인이었다. 이번에도 우리는 또다시 이방인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다. 당시 어린 여학생들을 프랑스의 시민으로 간주한다는 인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유세프 무쭈마흐)²³⁾

의 • 민중우애운동(le Mouvement contre le racisme et pour l'amitié entre les peuples, MRAP)은 ‘이슬람혐오증’과의 투쟁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²²⁾ (Robin 2006, 123)에서 재인용.

²³⁾ *ibid.*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에 대한 공포 분위기에서 촉발된 이슬람 낙인찍기 담론의 범람은 이렇게 통합의 방식과 공화국의 식민시대 잘못에 대한 논쟁이 새롭게 부각되는 토양을 형성하였다. 이들의 운동의 핵심목표가 이슬람혐오증과의 투쟁이라는 점은 이 조직의 구성원 대부분이 이미 “희잡 금지법” 반대투쟁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전력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희잡 금지법”을 반대하는 동원을 계기로 뿔뿔이 흩어져있던 이주민 청년운동 역량을 원주민이라는 하나의 상징아래 묶을 수 있는 전술적 해답을 찾은 셈이었으며 2004년 ‘희잡 금지법’으로 정점을 찍은 “희잡 논란”²⁴⁾은 이후 프랑스에서 포스트식민 담론이 급작스럽게 부상하는 맥락을 제공하였다.

3) 원주민운동의 발족에 대한 반응

“공화국 원주민들의 호소문”의 이름으로 알려진 텍스트를 기안하고 만든 주동자들은 이 호소문의 공개이후, 언론, 지식인, 운동단체 및 정당들이 빨리 들어간 격한 논쟁의 소용돌이의 중심에 놓일 것이라고는 아마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일부 논객들은 이들의 주장에 전격적인 공감을 표시하고 연대를 약속한 반면, 다른 논객들은 이들을 거대한 반공화주의적 공동체주의 음모의 주동세력으로 단정하였다. 또 많은 논객들은 이들 주장의 적실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여러 다양한 이유를 들어 이 운동과 거리를 두었다. 원주민들의 호소문이 온라인에 공개된 지 몇 주가 지난 후 중앙 일간지에서는 최초로 르몽드에서 이 호소문을 기사화하면서 호소문 작성자들의 반유대주의를 의심하는 냉소

²⁴⁾ 1989년 9월 18일 크레일(Créteil)의 한 공립 중학교에서 희잡을 착용한 여학생들이 학교 당국에 의해 등교가 거부되면서 “희잡 논란”이 프랑스에서 최초로 수면 위에 올랐다. 프랑스 사회에서 이슬람혐오가 발생한 원인에 관한 사회학적, 역사학적 분석은 (Hajjat, Marwan 2013) 참조.

적인 논평을 붙였다. 며칠 후, 시사주간지 『마리안느』의 주필 장-프랑소아 칸(Jean-François Khan)은 프랑소아 다라스(François Darras)라는 가명으로 “공화국의 원주민들”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면서 이 “전대미문의 얼빠진 텍스트가 “절대적인 퇴행을 보여준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²⁵⁾ 왜냐하면 이 호소문이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토록 찬양했던 출신이나 종교를 불문하고 과거와 현재의 피착취 민중과의 연대정신을 부정”하고 프랑스(본토)인을 “과거에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던 아니건간에 본질적으로, 또 현재에도 ”변함없는“ 노예제지지지들이거나 최소한 식민주의자들”로 규정하고, “프랑스 본토인들과 아무런 공유하는 것이 없는 원주민의 분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 호소문이 본질적으로 “반동적인 반공화주의, 반세속주의(anti-laïque), 공동체주의, 종족주의를 표방하는 좌파”를 자처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벤사이드를 비롯한 3명의 급진 지식인들은 3월 25일자 일간지 『리베라시옹』에 기고한 글에서 “원주민들”의 호소문이 “[피지배자들의] 연대와 동맹을 전개할 수 있는 모순과 갈등을 강조를 하는 대신에 식민적 특징을 영속화, 본질화하며 [...] 정치적 갈등을 종족화하거나 종교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호소문이 “마치 거울효과처럼, 착취와 분배 이슈를 내국인-외국인의 이분법으로 은폐하려는 우파의 전략과 정확히 대칭적 관점을 보여준다”고 논평하면서 이 운동에 거리를 두었다.(Bensaid D., Joshua S., Vachetta R. 2005)

일부 급진 좌파 운동원들이 개인적으로 서명에 참여하기도 하였던 공화국 원주민의 호소문은 여러 프랑스 급진정당 및 운동조직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을 야기했으며 특히 호소문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여부를 놓고 분열되었다. 트로츠키주의 혁명공산주의연맹(Ligue Communiste

²⁵⁾ 장-프랑소아 칸의 비판은 (Gèze 2005, 124)에서 재인용.

Révolutionnaire, LCR)의 정치국 내에서 특히 격한 논쟁이 일어났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호소문이 사회문제를 종족화²⁶⁾하는 주요 이론적 오류를 범했다고 보는 측과 분석적인 오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환영하는 측으로 나뉘어졌다.²⁷⁾ 최종적으로 LCR은 호소문이 “뿌리를 향한 추구와 연결되며 이것이 유행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투쟁을 종족화 혹은 종교화하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호소문에 대한 지지를 거부했다.²⁸⁾ ‘노동자 투쟁 (Lutte Ouvrière)’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호소문”이 오히려 “계급투쟁을 은폐”하고 공동체주의를 강화한다고 비난하면서 “턱수염들의 선동”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여 호소문에 서명한 “자칭 좌파들”에 대한 조롱으로 논평을 끝맺었다.²⁹⁾

프랑스의 대표적인 대안 세계화운동(alter-mondialisme) 단체 ‘국제금융관세연대(L’association pour la taxation des transactions financière et l’aide aux citoyens, Attac)’ 내에서도 호소문에 대한 지지여부를 둘러싼 내부 논쟁이 벌어졌다. 이 단체의 명예회장인 베르나르 카센(Bernard Cassen)은 호소문의 서명자 리스트에 포함된 “타릭 라마당 (Tariq Ramadan)에게 대안세계화 운동권의 신용장”을 주고 그에게 “붉은 양탄자를 깔아주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자신의 분명한 거

26) 종족화(ethnisation)란 최근 프랑스의 학문적/이념적 논쟁의 맥락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어떤 사회현상의 원인을 종족적 차이(옅긴 그르긴 간에)에서 찾는 태도로 정의될 수 있다. 역사학자 제라르 누와리엘(G rard Noiriel)은 특히 프랑스 사회의 맥락에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종족적 특징(origine)에서 찾는 방식으로 종족화가 진행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2005년 소요사태”에 대하여 “많은 논평가들이 이 소요사태를 인종-종족의 프레임을 통해 해석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민에 관한 담론의 종족화는 [프랑스 사회]에서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서 ‘공화주의적 통합모델의 실패’를 구성하는 담론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었다”고 진단한다. (Noiriel 2007) <https://fr.wikipedia.org/wiki/Ethnicisation>

27) "La LCR doit participer aux Assises," <http://www.preavis.org/breche-numerique/article502.html>

28) Communiqu  de la Ligue communiste revolutionnaire, 3 mars 2005.

29) "L'appel des Indig nes de la R publique : d noncer le colonialisme... ou renforcer le communautarisme?" http://www.lutte-ouvriere-journal.org/2005/03/09/lappel-des-indigenes-de-la-republique-denoncer-le-colonialisme-ou-renforcer-le-communautarisme_10376.html

부입장을 밝히면서 프랑스의 제3세계 운동권은 “호소문”에 대한 입장이 찬반양론으로 갈려졌다.³⁰⁾

3. 운동이념으로서의 포스트식민주의

1) 포스트식민과 “식민의 연속성(continuum colonial)”

“원주민”이라는 명칭이 이주민 청년운동의 새로운 상징으로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과거 프랑스의 식민치하에 살던 원주민들의 상황을 따로 떼어 놓고는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는 구 식민지 출신 이민자와 이민자 자녀들이 겪는 차별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즉 과거 식민지인들에 대한 프랑스 본토인들의 지배적인 표상이 현재에도 거의 변하지 않고 식민지 출신 이주민에게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소위 “식민지적 과거-현재”(passé-présent colonial)라는 표현으로 호소문에도 명시되어있다. “식민시절의 원주민은 프랑스인이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외국인도 아닌 존재였다(당시 식민당국은 원주민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였다³¹⁾).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프랑스 사회의 모든 체계적인 차별을 확인해 낼 수 있다”고 호소문 작성에 참여한 인물이며 알제리계 이주민 2세대 사회학자 사이드 부아마마(Said Bouamama)는 설명한다. 그는 “과거

30) 라마당과 2003년에 이미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카셈은 전자를 “진보의 탈을 쓴 이슬람원리주의자”로 비난한 바 있다.(Cassin 2005) 한편, ‘국제연대 연구와 이니셔티브 센터(Centre d’études et d’initiatives de solidarité internationale, Cedetim) 소장 베르나르 드레아노(Bernard Dréano)는 이 호소문에 서명하고 자신의 지지 이유를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Dréano 2006)

31) 제국주의시절 프랑스는(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의 식민제국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에 거주하는 원주민에게 특별지위(Le régime de l’indigénat)를 부여하여 프랑스 본국인이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 중 일부를 박탈하였다. 예를 들면, 원주민들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도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의 법적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자의적인 강제 이주의 대상이 되었다.

로부터 물려받은 스테레오타입이 아직까지도 현재의 실천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원주민”이라는 낱말을 선택했다고 말한다.(Febvre 2005) 그는 프랑스 사회에서 식민지 출신 이민자를 인식하고 다루는 3가지 기본 방식이 있는데 이것이 식민지 시대의 유산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과거의 “신뢰할 수 없는 피식민 대중”은 현재 이주민 2·3세대에 대한 지배적 표상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떠워주어야 할 소수 피식민 엘리트 계급”은 현재의 일부 극소수 이주민의 성공사례에 투영되며, 마지막으로 현재의 “희잡 금지법”은 과거의 피식민 여성해방 정책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2003년에 사르코지 내무부 장관의 주도로 설립된 프랑스 무슬림이사회(Conseil francais du culte musulman, CFCM) 또한 1920년대 알제리에서 식민당국이 실험했던 무슬림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서 “재정복”, “무법지대”, 사르코지 당시 내무부 장관의 “썩쓸이(Kärcher) 발언”³²⁾에 이르기까지 2000년대 이후 이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정부의 치안유지 일변도의 시각에서 이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마저도 과거 식민시대를 상기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이 구식민지 출신 이주민과 이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현재의 인식과 차별이 식민시대에 만들어진 지배적인 표상에 기인한다는 주장은 “식민지적 연속성”이라는 개념으로 함축된다. 이 개념은 또한 공화국(혹은 공화주의)과의 결별을 의미한다. 이들의 공화국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주민 운동”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을 거론할 필요가 있다.

“2004년 7월에 일어난 ‘RER D선 사건’³³⁾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

³²⁾ 2005년 10월 26일 방리우 소요사태가 확장일로에 있을 당시, 사르코지 내무부 장관은 파리 북부 아르장테유(Argenteuil)를 방문하여 시위대를 향해서 물대포(kracher)로 쏘어버리겠다고 경고했다.

³³⁾ 2004년 7월 9일 금요일, 23세의 한 젊은 여성이 수도권 급행 RER D선 열차 내에서

다. 당시 원주민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공동으로 “마리는 죄가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었다.³⁴⁾ 이 사건에서 프랑스 정치시스템 전체 그리고 언론 전체가 방리우의 청소년들을 악마화하는 것을 보았다. 마치 방리우는 나라에 속하지 않는 듯이, 프랑스의 외부에 존재하는 지역이듯이...” (유세프 무쭈마흐)³⁵⁾

결국 공화국으로부터 차별과 버림받는 존재라는 인식을 통해 이들은 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즉 이들에게는 공화국이 평등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을 구체적 구현하는 시스템으로 비춰졌다. 이렇게 해서 자신들을 공화국의 “시민”이 아니라 공화국의 “원주민”으로 스스로 낙인을 찍으면서 이들은 공화국에서 차별받는 존재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였다.

프랑스에서 반인종주의 투쟁의 운동영역은 1980년대에 극우파의 대두에 대한 반작용으로 친사회당 운동조직인 SOS 인종차별의 주도아래 정치적 이슈로 구성되었다. 특히 반인종주의 담론은 극우 인종주의로 대변되는 “반시스템” 행위자들에 의해 위협받는 “공화주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명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Juhem 2001) 그러나 포스트 식민주의를 표방한 “원주민 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공화국은

칼을 든 6명의 아랍계 청소년들이 자신을 공격해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매직펜으로 배에 3개의 나치문양을 그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날 저녁, 그녀의 증언은 내무부 장관 비서실에 보고되었고 이 사건은 AFP를 통해서 언론사에 퍼졌다. 이 사건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뤄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 내에서 즉각적으로 지탄하는 반응을 야기했다. 그러나 3일 후, 이 여성은 혼자 사건을 지어낸 것이라고 자백했다. 이 여성은 “허위 신고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34)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면 그 재판은 모든 인종주의에 대한 재판이어야 하고 이 인종주의를 이용하는 자들에 대한 재판이어야 하며 모든 인종주의를 더욱 악화시키는 공공 정책으로서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재판이어야 한다. 또한 이 재판은 식민역사에 대한, 노예제도에 대한, 그리고 이들의 유산에 대한 재판이어야 한다.”고 성명서는 밝히고 있다. “Marie n’est pas coupable! Pour une lecture politique de ‘l’affaire du RER D’.” 26 juillet 2004. <http://lmsi.net/Marie-n-est-pas-coupable>

35) (Robin 2006, 123)에서 재인용.

단지 식민적 차별을 은폐하는 허상이며 식민주의와 마찬가지로 비판 받고 청산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호소문 작성자들에 의하면, 공화국은 실상 “꿈꾸는 공화국(République revée)”과 “현실의 공화국(République réelle)”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호의적인 “공화주의”의 이상적 세계를 표상하지만 이는 실상 폭압적인 후자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무력화시키는 “역사적 기능”을 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공화국을 담론 수준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는 이 공화국의 구체적인 현실과 행동을 바라볼 뿐이다. 우리는 식민화와 억압, 배제와 인종주의, 등 현실의 공화국의 모습을 그토록 폭로하지만 꿈의 공화국(la République revée)을 언급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전혀 혹은 거의 존재한 적도 없는 세상을 정의하는 이 꿈의 공화국의 유일한 역사적 기능은 현실의 공화국을 은폐하는데 있다. 우리가 유니콘의 적이 아니듯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꿈의 공화국의 적이 아니다.(Khiari ·Levy·Hericord 2005, 3/10bar)

공화주의에 대한 “원주민들”의 거리두기는 구체적으로 공화주의적 보편주의와 라이시테 원칙에 대한 상대주의적 비판으로 구체화되면서 결과적으로 포스트모던 다문화주의가 “원주민 운동”의 궁극적인 지평으로 윤곽을 드러낸다.

“나는 종족, 국적, 기원, 문화, 성에 관계없이 종교가 억압이고 인간 해방은 종교에 대항하면서 실현된다는 사고에 반대한다. 이러한 생각은 프랑스만의 무기력한 생각일 뿐이다... : 이 사고는 프랑스의 역사에 기인한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 교회는 과거 프랑스 사회를 지배했다. 또 국민들을 상대로 무서운 권력을 휘둘렀다. 기타 등등. 이에 맞

서 종교에 저항하는 운동이 있었고 이것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로 귀결되었다. 이것은 프랑스만의 역사이다. 아랍과 아프리카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필요없는 사회도 있으며 이 사회에서 종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는 말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아편일 수도 있지만 그 맥락에 따라 다르다. 종교는 인간해방에 기여할 수도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이 이 경우이다. [...] 프랑스의 라이시테는 내 생각에 하나의 종교이며 이것 역시 하나의 시스템으로 억압적일 수 있다. [...] 모든 문화를 존중해주어야 한다. 하류 문화는 없다. 우리는 모든 이의 평등을 원할 뿐이다”.(후리아 부텔자)³⁶⁾

2) 학술담론에서 운동이론으로

과거 대혁명 이래 프랑스 정치사회의 컨센서스로 자리잡은 공화주의 사상을 정면으로 거부하였던 세력들은 항상 극우·반동적인 이념을 표방하였으며 이들 정치세력들은 역사의 퇴행으로 표상되었다. 그러나 MIR처럼 진보와 차별반대, 인간 해방의 가치를 표방한 운동세력이 포스트 식민을 앞세우고 공화국을 전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적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충격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MIR이 제기한 공화주의 비판의 주요 테마들은 실상 프랑스 학계, 특히 역사학계에서 일부 학자들이 포스트 식민연구의 일환으로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하였던 테마들이었다. 실상 “원주민”들이 운동이념으로 발전시킨 프랑스 공화주의에 대한 급진적 비판의 자양분은 프랑스 학계 내부의 포스트 식민연구에서 직접 제공되었다. 따라서 원주민 운동이론의 지적(知的)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식민연구가 프랑스 학계에

³⁶⁾ (Robin 2006, 133)에서 재인용

도입된 배경과 포스트 식민담론을 중심으로 구조화되는 학계 내부의 대립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포스트식민 연구(Postcolonial Studies)는 약 30년 전, 영·미 인문학계에서 포스트모던 담론의 한 지류로써 생성된 학문적 경향이다. 파농(Frantz Fanon), 세제르(Aimé Césaire), 메미(Albert Memmi), 샤므와조(Patrick Chamoiseau)처럼 포스트 식민연구에서 자주 회자되는 프랑스어권 저자들이 있지만 이들은 영·미학자들이 주도하는 문제의식과 논의에 전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그동안 소수의 영·미 포스트 식민 문학에 대한 소개와 번역본 출간이 있었지만 인문·사회학계 전반은 포스트모던 담론과 마찬가지로 포스트식민 연구에 냉담하거나 무관심했다. 그러나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일부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포스트식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영·미권의 경우, 포스트 식민담론의 생성과 순환, 및 논쟁이 주로 대학 캠퍼스 인문학부(문학/역사학) 테두리 안에 국한 된 반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포스트식민 담론은 학계의 논의를 벗어나 공론장의 정치적 논쟁에 직접 개입되고 원주민 운동을 계기로 이것이 하나의 운동이념으로 발전되어 대중적 동원의 논리로 작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그 이유는 200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포스트식민 담론이 영·미권과는 매우 상이한 사회적 맥락에서 부상하게 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영·미권 대학에서 포스트 식민연구는 크게 두 지점에서 발원되었다. 첫째 지점은 인도출신 역사학자 라나지트 구하(Ranjit Guha)가 주도한 서발턴 연구(subaltern studies)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 이 연구프로젝트는 인도에 대한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적, 맑스주의적 역사인식에서 탈피한 인도의 기층 민중, 특히 농민에 대한 독자적인 역사 서술을 목표로 두었다.(Merle 2004) 둘째 지점은 팔레스타인 출신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 열어놓은 관점으로 촉발되어 피식민 사회에 잔존

하는 식민지 담론, 식민 이데올로기, 식민주의적 재현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Saïd 1978) 이 두 포스트식민주의 프로젝트는 과거 피식민지였던 사회 고유의 고민에 착근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 출신의 연구자들의 주도아래 기획되어 식민과 포스트식민의 맥락에서 권력관계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식민지 출신 지식인들이 포스트식민주의 담론을 주도한 영·미권과는 달리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 학자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프랑스 사회에 관한 논쟁의 맥락에서 포스트 식민담론이 도입되었다. 포스트식민 이슈를 둘러싼 논쟁은 “식민적 상상(imaginaire colonial)”, “속죄(repentance)” 그리고 “식민화의 긍정적 역할”과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이 이슈들은 학문논쟁의 범위를 벗어나 공론장의 영역을 뜨겁게 달구었다.

특히 식민 과거(passé colonial)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된 프랑스 역사학계의 논쟁은 3개의 축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었다.³⁷⁾ 첫째 축은 민족주의와 식민제국의 향수에 젖은 담론(discours national-sécuritaire et nostalgique de l'Empire colonial)을 생산하는 보수주의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Gallo 2006; Lefeuvre 2006) 둘째 축은 포스트 식민담론을 주도하는 그룹으로 구성되었다.³⁸⁾ 이들은 특히 두 가지 핵심 가설을 입증하는데 몰두하였다. 첫째는 현대 식민이데올로기의 공화주의적 기원의 가설이었다. 『식민적 골절(La fracture coloniale)』의 서문에서 이들은 프랑스의 식민화 정책이 역사적으로 제3공화정과 본질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Blanchard, Bancel, Lemaire 2005) 둘째는 프

37) 역사학계 논쟁구도에 관한 이후의 언급은 아자트(Hajjat)의 분석을 차용하였다. (Hajjat 2008)

38) 르쿠르-그랑매종(Olivier Lecour-Grandmaison), 블랑샤르(Pascal Blanchard), 방셀(Nicolas Bancel), 등이 주도하는 “아프리카 현대사 지식협회(Association pour la connaissance de l'histoire de l'Afrique contemporaine, ACHAC)” 소속 역사학자들을 들 수 있다. (Chambarlhac 2010) 참조.

랑스의 [과거] 식민지 경영과 [현재]의 식민지 출신 이주민을 다루는 방식 간에 영속성이 존재한다는 “식민적 영속성”의 가설이었다. 마지막 축은 전자의 보수주의적 성향과 후자의 공동체주의적 성향 모두를 비판하는 학자들이다. 이들은 특히 후자가 강조하는 “식민지적 균열”이 “사회적 갈등과 사회운동의 현실에 대한 분석과 해답을 찾기 보다는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Liauzu, Meynier, Vidal-Naquet 2005)³⁹⁾ 한편, 포스트식민 담론은 역사학계를 넘어 문화인류학(Amselle 2008), 정치학(Bayart 2009, 2010; Bayart & Romain 2006; Romain 2006a, 2006b), 지정학(Lacoste 2006)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전공 학자들의 매우 적극적인 비판적 대응을 초래하였다. 이들은 특히 “식민지적 영속성” 가설에 대한 논증의 방법론적 오류를 지적한다.⁴⁰⁾ 구식민지 출신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식민지적 영속성”의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방리우 문제의 본질을 “식민적 골절”로 인식하는 관점은 “공화국의 원주민” 운동 이념이 되기 전에 학계 일각에서 포스트 식민연구의 일환으로 이미 몇 년 전부터 제기되었던 관점이었다. 실상 콜로키엄과 전문 학술지, 서평, 등의 지면을 통해 학계의 논쟁에 국한되었던 포스트 식민 담론은 2005년을 기점으로, 특히 “공화국의 원주민들”의 호소문을 계기로 언론과 출판계 및 시민운동권 전체의 중요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그해 11

39) 블랑샤르와 클로드 리아쥬 사이의 논쟁은 다음의 르몽드디플로마티크 지면을 통해 전개되었다:

<http://www.monde-diplomatique.fr/2007/04/LIAUZU/14643>

<http://www.monde-diplomatique.fr/2007/05/A/14686>

40) 로맹(Romain Bertrand)은 이들의 비교론적 관점을 “정교함이 결여된 시대착오적 비교(rouleau compresseur de la comparaison anachronique)”로 비판하며 과거의 피식민인과 현재의 이주민을 동격으로 치환시키는 사례는 역사학의 범주를 넘어 운동 담론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Romain(a) 2006, 144) 마찬가지로 포스트 식민연구는 방법론적 엄밀성과 경험적 근거의 부족(Bayart 2009, Amselle 2008), “식민성”의 과대결정론의 오류, 이원론적 단순논리(중앙/주변부, 본국/식민지, 지배/피지배), 그리고 식민적 헤게모니와 폭력이 여전히 재생산된다는 가정아래 소수자들을 항상 고통과 비판에 빠진 존재로 환원하는 경향, 등이 지적된다.

월에 발생한 대규모 소요사태를 해석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로 부상되었다.

3) 상징투쟁과 담론영역에 특화된 원주민운동

모든 사회운동 조직은 항상 그 조직이 대변을 자임하는 사회집단의 대표성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한다. 공화국의 원주민들의 경우 이 대표성 문제가 더욱 첨예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미천한 학력/문화적 자본으로 특징되는 사회집단(이주민)을 대변하는 운동원 대부분이 특히 고학력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운동의 이념적 리더 격인 사드리 키아리(Sadri Khiari)는 정치학 박사이며 사이드 부아마마는 사회학자⁴¹⁾, 유세프 부수마흐(Youssef Boussoumah)는 고등학교 역사-지리 교사이며 후리아 부텔자(Houria Bouteldja)는 응용 언어학(아랍어-영어) 석사학위 소유자다. 기존의 이주민 청년 단체들이 현장노선을 고집하고 있다면 MIR는 현장과 동떨어진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운동원의 프로필을 가진다. 현장과의 약한 연결고리로 인한 ‘원주민 운동’의 정당성의 결핍을 이들은 담론영역에서의 구별전략(포스트식민 담론)과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으로 만회하는 방법을 구사한다. 담론을 통한 구별전략은 특히 “공화국의 원주민들”, “수시앵(souchien)”⁴²⁾과 같은 신조어(新造語) 및 68혁명을 연상하는 기발한 구호(“너나 통합되세요!(Va t’faire intégrer!)”, “과시합시다!(Soyons ostensible s)!”), “햄을 먹어야하는 통합반대! Non à l’intégration par le jambon!”)

41) 사이드 부아마마는 원주민 운동이 2010년에 정당(‘공화국 원주민당’, PIR)으로 탈바꿈하자 이탈하였다.

42) 국민전선(FN)이 이주민과 대칭되는 용어로 사용하는 “본래 프랑스인 Français de souche”을 페르디화하여 후리아 부텔자는 TV 토론 방송에서 “수시앵(souchiens)”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사용하여 논란을 빚었다. “수시앵”은 “개(chiens)만도 못한 사람”으로 유추될 여지가 있는 모독적인 욕설로 비추어질 수 있다. 2010년 5월, 한 극우 편향 시민단체(AGRIF)는 후리아 부텔자를 인종주의 모독죄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와 포스터를 이용하여 운동의 급진성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글쓰기(원주민 소식지, 홈페이지 운영, 성명서, 등), 공청회·토론회·공연 및 방송국 토론프로그램 출연⁴⁴⁾, 등에 집중된 MIR의 운동방식은 따라서 운동원들의 높은 학력과 문화자본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담론영역에서 이들이 취한 급진성은 일정한 정치적, 윤리적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표출되었다. 예를 들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이들의 선전활동이 도발적인 문구로 점철되어있으나 듀도네(Dicudonné)와 소랄(Alain Soral)로 대표되는 신보수주의 인종혐오론자들이 온라인상에 펼치는 “노이즈 마케팅”과 비교할 수는 없다고 코르퀴프는 지적한다.(Corcuff 2015) 마찬가지로, 2005년 가을에 발생한 대규모 소요사태에 대한 이들의 논평도 당시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라는 문구로 끝맺는 성명서에서 폭동 가담자들의 행동을 변호하였던 MIB보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톤을 유지하였다.⁴⁵⁾ “원주민들”은 소요사태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당시 주류 언론이 사건을 보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매우 신랄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물론 차별받는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단호하게 발언하고 평등을 위한 투쟁, 그리고 원주민 신분에 갇히지 말고 공화국의 탈식민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하였지만 이들은 폭동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폭동 가담자들의 자제를 호소하였다.

43) 흔히 “회잡착용 금지법”으로 알려진 법의 정식 명칭은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적 상징 착용에 관한 법(La loi sur les signes religieux dans les écoles publiques)”이다. 이 법은 공립학교(초중고)에서 학생에 자신의 종교적 소속을 과시적으로(ostensiblement) 표현하는 상징물의 착용을 금지한다.

44) MIR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후리아 부텔자는 France3 채널 토론 프로그램인 “Ce soir ou jamais”의 단골 조정자이다.

45) <http://www.statewatch.org/news/2005/nov/02france-emergency-2.htm>

4. 결론을 대신하여 : 공화국의 원주민 운동의 한계와 의미

한 집단을 대표하고 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집단을 지칭하고 집단적 정체성을 정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이 계급의식에 각성하면서 그 동력을 얻었다. 그러나 원주민 운동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복잡하다. 과연 이주민(자녀)들이 “원주민 의식”에 눈을 뜨고 “(포스트 식민) 원주민”이라는 정체성에 자신을 동일시 할 수 있을까? “공화국의 원주민”이라는 기발한 명칭이 구식민지 출신 이주민의 차별을 함축적으로 담은 덕분에 호소문이 발표된 직후 언론과 진보 운동권에 큰 반향과 관심을 일으킨 사실과 이 명칭에 방리우 주민들이 자신을 동일시하고 원주민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2005년의 호소문이 6000명의 서명을 이끌고 기존의 많은 이주민 운동 단체의 지지를 얻어내어 성공을 거둔 반면에 이후 “공화국의 원주민”은 대부분의 포스트식민 이주자에게 그다지 어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Corcuff 2013) 2010년에 공화국 원주민당(Parti des indigènes de la République)으로 변신한 이 조직의 당원 수에 대한 믿을 만한 자료가 없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외부의 가장 우호적인 예측이 최대 수 백 명이며, 일부에서는 수 십 명에 불과 할 것으로 추측한다. “원주민 운동”의 개시를 알리는 호소문이 발표된 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원주민”은 여전히 이주민들에게는 낯선 명칭으로 남아있다.

“원주민 운동”의 이론적 한계는 이 운동 초기 “비판적 지지”를 표명했던 코르크뤼프(Philip Corcuff)의 지적을 따르자면 “식민적 과대결정론”과 “원주민 순혈주의”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포스트 식민주의를 표방한 MIR의 구별전략이 프랑스의 담론 영역에서 야기된 갈등은 본질적으로 사회현실에 관한 정의와 해석을 둘러싼 상징투쟁의 성격을 띤

다. “원주민 운동”의 이념적 근거가 되는 포스트식민주의는 다른 모든 정치 이념과 마찬가지로 현실의 문제에 대한 분석적 도구를 내포하며 차별의 의미와 원인을 밝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탈식민주의가 현실에 대한 분석과 해석의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 간주해버리는 순간 이것은 현실의 모든 음양각과 모순, 그리고 구체적으로 부상하는 저항을 깔아 뭉개버리는 불도저로 변신한다.”(Corcuff 2015, 6/10bar) 즉 현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식민유산에서 찾는 “식민지적 과대결정론”에 빠질 수 있으며 이러한 징조는 이미 “공화국 원주민들”의 호소문의 다음의 문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원주민’의 형상이 [프랑스의] 정치, 행정, 사법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억압, 차별 및 사회적 착취의 논리에 밀접히 연결되어 활성화시킨다.” 또한 현재의 “차별받는 시민”과 과거의 “식민지 백성”간의 등치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식민적 연속성” 패러다임은 프랑스정치의 컨센서스로 자리 잡은 공화주의 프로젝트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단절로 이어지면서 넓게는 프랑스의 정치지형, 좁게는 기존의 진보적 운동권 공간에서 이 운동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지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반공화주의 담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들의 급진적인 구별전략은 전통적 좌파의 반인종주의적 제3세계 운동이념, 즉 공화주의의 기치아래 “공화주의를 배반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와 투쟁했던 이전 시대의 운동권 이념과의 단절로 나타나면서 이들을 더욱 고립화시켰다.

또한 이 운동조직이 정당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원주민 순혈주의”의 경향이 확연히 나타나면서부터 초창기에 외부에서 받았던 관심과 지지로부터 멀어지고 “원주민 운동”의 고립은 더욱 강화되어 나갔다. 이 단체의 핵심 리더이며 호소문의 주요 작성자 중 하나인 사드리 키아리는 2006년에 출간한 저서에서 미국 흑인운동가들의 정치 개념

을 도입하여 “백인 정치의 장”이라는 개념을 이론화시키면서 프랑스 정치구조에 대한 매우 과감한 “인종적 해석”을 시도한 바 있다.(Khiari 2006) 또한 선언문에서 최소한 상징적으로나마 추구하였던 종교/문화/지역적 차이를 넘는 모든 피식민 후손들의 연대(알제리의 세티프, 베트남의 디엔비엔푸, 코트디부아르 언급, 등)는 이 운동이 무슬림 정체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 이들의 “원주민 순혈주의”는 특히 다문화 가정이나 혼혈(특히 백인과의 결혼)을 원주민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후기식민지적 간계(ruse postcoloniale)로 치부하는 입장에서 명확히 나타난다.(Khiari 2006, 106)⁴⁶⁾ PIR의 당원인 베납텔라는 심지어 혼혈인을 “인종의 배신자” 혹은 “백인권력의 무기”로 규정하고 혼혈을 “식민권력의 산물”로 환원한다. 혼혈정책이 과거 스페인 정복자들의 식민지 지배의 일환이었던 점을 상기하려는 의도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혼혈이 또한 역으로 반식민주의와 반인종주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는 “좌파 백인들”의 “몰식민적(a-coloniaux)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한다.(Benabdellah, 2015) PIR의 “식민적 과대결정론”과 “원주민 순혈주의”는 반인종주의 운동권 및 페미니즘과 동성애운동권에서 현실의 복잡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들 운동권과의 연대의 가능성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주민 운동영역에서 MIR과 경쟁관계에 있는 현장운동노선 중심의 이주민 운동조직들의 주된 활동 방식이 공권력과의 물리적인 대결(불법체류자 추방 반대운동, 혹은 이민법 개정투쟁 등)에 치중된 반면에 MIR는 전적으로 상징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힘의 관계에만 개입한다. 이 단체가 말과 사상의 투쟁에 특화된 이유는 현장에서 운동을 유지

46) 부텔자 또한 무슬림과 비 무슬림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을 한 인터뷰에서 표명한 바 있다.(Izambert, Guilibert, Wahnich 2015, 66).

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징적 차원에 집중하는 원주민 운동은 시위와 파업, 등의 대중동원과 물리적 대결을 불사하는 구사회운동(노동/빈민 운동)보다는 신사회운동(시민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등)에 가깝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실천과 무관하게 포스트식민 이주자들의 저항을 통일하는 축으로 자처하는 전위적 태도와 파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활동영역이 MIR의 한계로 지적된다. “공화국의 원주민들? 담론과 현실은 다르다. 이들은 현장경험이 전무하다. 파리의 살롱에서나 TV에서 만들어진 담론에 이끌릴 수도 있지만 이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MIB의 핵심 리더인 타릭 카와타리는 2008년 인터뷰에서 MIR의 문제점을 지적한다.(Kawtari 2008, 214) 같은 취지에서 사회학자 하자트는 원주민 운동을 “본질적으로 벽에 갇힌 파리의 현상(전국적 차원의 운동기반의 부재)”으로 매몰차게 평가한다.(Hajjat 2008) 심지어 역사학자 제라르 느와리엘은 원주민들의 “식민주의에 대한 독설이 언론에서 성공하는 이유는 이 독설이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담론 영역에서 부각되는 이들의 급진성의 정치적 효능 자체를 의심한다.(Gérard Noiriel 2006, 218)

2005년, “공화국 원주민 운동”의 탄생과 프랑스 식민지배의 “긍정적 역할”을 명시한 조항이 삽입된 “2005년 2월 23일 법”의 제정 및 그해 가을, 방리우에서 벌어진 대규모 소요사태의 여파와 함께 프랑스 사회는 전례가 없는 포스트식민 담론의 범람을 겪었다. 포스트식민 이슈를 전면에 내걸고 출범한 “원주민 운동”은 한편에서는 우려, 냉담 및 비판을 낳았으며 다른 편에서는 환호와 기대 및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하나의 사회운동으로서 “원주민 운동”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 운동이 프랑스의 진보운동권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

는 앞서 언급된 편협한 운동 노선과 현장으로부터 단절된 운동 방식에서 노출된 명백한 한계를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공화주의적 공동체주의” 신봉세력 혹은 “미국식 다문화주의에 경도된 운동세력”으로 낙인찍는 일부 “공화국의 근본주의자들”⁴⁷⁾의 날선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의 원주민 운동”은 (구)식민지 출신 이주민, 특히 북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및 이들의 후손에 대한 차별의 역사적·구조적 원인을 밝혀 이를 공론장의 핵심 이슈로 올려놓고, 더 나아가서 프랑스 사회가 자신의 “식민 과거”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이 운동은 과거 그리고 현재에도 “공화국의 이름으로”, 혹은 “라이시테의 이름으로” 자국민 일부에게 강요하는 이러 저러한 법률적 조치들의 배후에는 특정한 형태의 “이슬람 혐오”가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또 이러한 조치들이 결과적으로 포스트 식민 이주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배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지를 지속적으로 자문하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프랑스 사회 전체에 던졌다고 말할 수 있다.

(2015년 10월 2일 접수, 11월 19일 심사완료, 11월 20일 게재확정)

47) “Les «intégristes de la République» et les émeutes de novembre.” Mouvements, dossier «Les émeutes, et après?», 44. mars 2006.

참고문헌

- 김용우. 2012. “식민주의의 부메랑과 역사학—프랑스 2005년 ‘2월 23일 법’을 둘러싼 논쟁.” 『서양사론』. 115. 41-62.
- 박단. 2006.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와 무슬림 이민자 통합문제” 『프랑스사연구』. 14. 225-261.
- 박단. 2011. “현대 프랑스 사회의 무슬림 이민자와 세속화 문제.” 『서양사론』. 233-253.
- 박단. 2013. 『프랑스공화국과 이방인들』, 서울: 서강대출판부.
- 엄한진. 2007. “프랑스 이민통합 모델의 위기와 이민문제의 정치화 : 2005년 프랑스 도시외곽지역 소요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3). 253-286.
- Amelle, Jean-Loup. 2008. *L'Occident décrochée : enquête sur les postcolonialismes*. Paris: Stock.
- Bayart, Jean-François. 2009. “En finir avec les études post-coloniales.” *Débat*. 154. 119-140.
- Bayart, Jean-François. 2010. *Les études postcoloniales, un carnaval académique*. Paris: Ed. Karthala.
- Beaud, Stéphane & Masclat, Olivier. 2006. “Des ‘marcheurs’ de 1983 aux ‘émeutiers’ de 2005. Deux générations sociales d’enfants d’immigrés”, *Annales. Histoire, Sciences Sociales*. 61(4). 809-843.
- Blanchard P., Bancel N., Lemaire S. (eds.). 2005. *La fracture coloniale : la société française au prisme de l’héritage colonial*. Paris: La Découverte.
- Bouamama, S. 1994. *Dix ans de marche des Beurs. Chronique d’un mouvement avorté*. Paris: Desclée de Brouwer.
- Boubeker, A. & Hajjat, A. (eds.). 2009. *Histoire politique des immigrations postcoloniales. France, 1920-2008*. Paris: Éditions Amsterdam.
- Cassin, Bernard. 2005. “Ces altermondialistes en perte de repères”, *Politix*, 835. 20 janvier 2005.

- Chrétien, Jean-Pierre. 2006. "Certitudes et quiproquos du débat colonial." *Esprit*. 2. 174-186.
- Cohen, Jim. 2007. "La bibliothèque postcoloniale en pleine expansion." *Mouvements*. 51(3). 166-170.
- Cohen, Jim. 2007. "Dossier. Le tournant postcolonial à la française." *Mouvements* 51(3). 7-12.
- Chambarlhac, Vincent. 2010. "Fragments du jeu académique postcolonial (à propos d'un collectif, l'Association pour la connaissance de l'histoire de l'Afrique contemporaine, ACHAC)." *Histoire Politique*. 12.
- Coquery-Vidrovitch, Catherine. 2009. *Enjeux politiques de l'histoire coloniale*. Marseille: Agone.
- Coquio, Catherine (eds.). 2008. *Retours du colonial? Disculpation et réhabilitation de l'histoire coloniale française*. Nantes: L'Atalante.
- Costa-Lascoux, Jacqueline. 2001. "L'ethnisation du lien social dans les banlieues françaises." *Revue européenne des migrations internationales*. 17(2). 123-138.
- Fanon, Frantz. 1961. *Les damnés de la terre*. Paris: Maspéro.
- Febvre, Coralie. 2005. "Le nouveau combat des 'Indigènes.'" *L'Histoire*. 302. octobre. 86-89.
- Gallo, Max. 2006. *Fier d'être français* Paris: Le Livre de poche.
- Gèze, François. 2005. "Les 'indigènes' au secours de la République?" *Mouvements*. 41(4). 124-126
- Guénif-Souilamas, Nacira. (eds.) 2006. *La République mise à nu par son immigration*. Paris: La Fabrique.
- Hajjat, Abdellali. 2008. "Révolte des quartiers populaires, crise du militantisme et postcolonialisme." in: Boubeker A. & Hajjat A. (eds.), *Histoire politique des immigrations (post)coloniales*. France, 1920-2008. Paris: Éditions Amsterdam. 249-264.
- Hajjat, Abdellali. 2013. "Retour sur la Marche pour l'égalité et contre le racisme",

- Hommes et migrations. 1304. 151-155.
- Hajjat, Abdellali & Marwan Mohammed. 2013. Islamophobie. Comment les élites françaises fabriquent le “problème musulman”. Paris: La Découverte.
- Juhem, P. 2001. “Entreprendre en politique. Les carrières militantes des fondateurs de SOS Racisme.”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51(1-2). 131-153.
- Kawtari, T. 2008. “Du Comité national contre la double peine au Mouvement de l’immigration et des banlieues.” in. Boubeker A. & Hajjat A. (eds.), *Histoire politique des immigrations (post)coloniales*. France, 1920-2008. Paris: Éditions Amsterdam.
- Khiari, Sadri. 2006. *Pour une politique de la racaille : immigrés, indigènes et jeunes de banlieues*. Paris: Textuel.
- Kokoreff, Michel. 2011. “L’Émeute et le postcolonial à l’épreuve du politique dans les quartiers populaires.” *Mouvements*. (HS n°1). 87-96.
- Laacher, Smain. 2005. “Note critique sur L’Appel des indigènes de la République.” *Mouvements*. 41(4). 119-123
- Lacoste, Yves. 2006. “La question postcoloniale.” *Hérodote*. 120. 5-27.
- Labica Georges, Arzalier Francois, Le Cour Grandmaison Olivier, Tevanian Pierre, Bouamama Said. 2007. *Une mauvaise décolonisation. La France: De l’empire aux émeutes des quartiers populaires*. Pantin: Le Temps des Cerises,
- Le Cour Grandmaison, Olivier. 2008. “Colonisé-immigré et ‘périls migratoires’ : origines et permanence du racisme et d’une xénophobie d’Etat (1924-2007).” *Cultures et conflits*. 69. 19-32.
- Lefeuvre, Daniel. 2006. *Pour en finir avec la repentance coloniale*. Paris: Flammarion.
- Leménager, Grégoire. 2006. “Des études (post)coloniales à la française.” *Labyrinthe*. 24(2).
- Liauzu C., Hemery D., Meynier G., Vidal-Naquet P. 2005. “Où va la République?” *Libération*. 16 novembre.
- Mbembe, Joseph-Achille. 2005. “La République désœuvré : la France à l’ère

- post-coloniale.” Débat. 137. 159-175.
- Merle, Isabelle. 2004. “Les subaltern studies. Retour sur les principes fondateurs d’un projet historiographique de l’Inde coloniale.” Genèses, 3. 131-147.
- Noiriel, Gérard. 2006. “Itinéraire d’un engagement dans l’histoire.” Entretien. Mouvements. 45/46. mai-août 2006.
- Noiriel, Gérard. 2007. Immigration, antisémitisme et racisme en France. Paris: Fayard.
- Robine, Jérémy. 2006. “Les indigènes de la République : nation et question postcoloniale : territoires des enfants de l’immigration et rivalité de pouvoir.” Hérodote. 120. 118-148.
- Robine, Jérémy. 2008. “Des ghettos dans la nation : conflit géopolitique à propos des enfants français de l’immigration postcoloniale.” Hérodote. 130. 173-208.
- Romain, Bertrand. 2006(a). Mémoires d’Empire : La controverse autour du «fait colonial». Bellecombès-en-Bauges : Editions du croquant.
- Romain, Bertrand. 2006(b). “La mise en cause(s) du "fait colonial" : retour sur une controverse publique.” Politique africaine. 102. 28-49.
- Said, Edward Wadie. 1978. Orientalism : Western conceptions of the Orient. New York: Pantheon.

[인터넷 자료]

- Benabdellah, A. 2015. “«Le Métis» et le Pouvoir Blanc.” 22 juin. <http://indigenes-republique.fr/le-metis-et-le-pouvoir-blanc/>
- Bensaid D., Joshua S., Vachetta R. 2005. “Quand la raison s’affole”, Libération, 21 mars. http://www.liberation.fr/tribune/2005/03/21/quand-la-raison-s-affole_513708 (검색일: 2015.7.5)
- Bouamama, S. 2005. “La construction des ‘petits blancs’ et les chemins du politique.” Contretemps, mai. <http://lmsi.net/La-construction-des-petits-blancs> (검색일: 2015.4.11)

- Corcuff, Philippe. 2013. “Enjeux pour la gauche de gauche en France en 2013 : éclairages autobiographiques.” Mediapart. 27 mai 2013.
<http://blogs.mediapart.fr/blog/philippe-corcuff/270513/enjeux-pour-la-gauche-de-gauche-en-france-en-2013-eclairages-autobiographiques> (검색일: 2015.4.11)
- Corcuff, Philippe. 2015. “Indigènes de la République, pluralité des dominations et convergences des mouvements sociaux.” <http://www.grand-angle-libertaire.net/indigenes-de-la-republique-pluralite-des-dominations-et-convergences-des-mouvements-sociaux-philippe-corcuff/> (검색일: 2015.7.5)
- Dréano, Bernard. 2006. “Lettre d’un aborigène de la République (ou pourquoi je signe avec les Indigènes)” <http://indigenes-republique.fr/lettre-dun-aborigene-de-la-republique-ou-pourquoi-je-signe-avec-des-indigenes/> (검색일: 2015.4.11)
- Izambert C., Guillibert P., Wahnich S. 2015. “Revendiquer un monde décolonial”, entretien avec H. Bouteldja. Vacarme. 71(printemps). <http://www.vacarme.org/article2738.html> (검색일: 2015.4.11)
- Khiari S., Levy L, Hericord A. 2005. “Indigènes de la République : réponses à quelques objections...”, 24 février. <http://indigenes-republique.fr/indigenes-de-la-republique-reponses-a-quelques-objections/> (검색일: 2015.4.11)
- (저자불명) “La LCR doit participer aux Assises”, <http://www.preavis.org/breche-numerique/article502.html> (검색일: 2015.7.5)
- Ben Hiba, Bouamama, Crinon, Djamila, Bechoua, Delphy, Azouz, Farès, Sivan, Tévanian, Dréano, Geisser, Boussoumah, Meftah, Youssef, Iznasni. 2004. “Marie n’est pas coupable! Pour une lecture politique de ‘l’affaire du RER D.’” <http://lmsi.net/Marie-n-est-pas-coupable> (검색일: 2015.6.28)
- “L’appel des Indigènes de la République : dénoncer le colonialisme... ou renforcer le communautarisme?” http://www.lutte-ouvriere-journal.org/2005/03/09/lappel-des-indigenes-de-la-republique-denoncer-le-colonialisme-ou-renforcer-le-communautarisme_10376.html (검색일: 2015.7.5)

Statement by the immigrant movement MIB on the situation in France

<http://www.statewatch.org/news/2005/nov/02france-emergency-2.htm>

(검색일: 2015.6.28)

“Les «intégristes de la République» et les émeutes de novembre.” Mouvements, dossier «Les émeutes, et après? ». 44. mars 2006.

<http://oumma.com/Les-integristes-de-la-Republique> (검색일: 2015.6.28)

<http://www.monde-diplomatique.fr/2007/04/LIAUZU/14643> (검색일: 2015.4.11)

<http://www.monde-diplomatique.fr/2007/05/A/14686> (검색일: 2015.4.11)

“우리는 공화국의 원주민이다!”⁴⁸⁾

포스트식민적 반식민주의 운동의 시작을 위한 호소문

(Appel pour des Assises de l’anti-colonialisme post-colonial)

취업, 주거, 보건, 학교, 여가에서 차별받는 (구)식민지 출신들은 사회적 배제와 고용 불안정의 일차적인 희생자들이다.

출신지역과 관계없이 “동네” 주민들은 “원주민화”되어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났다. “방외”는 소위 “무법지대”가 되어 공화국이 “재정복”해야 할 지역이 되었다. 불심검문, 다양한 도발, 모든 종류의 학대, 그리고 경찰의 난폭한 행동은 사법부의 이중 잣대로 거의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화국에 편죄부를 주기위해 그들은 우리 부모들의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들의 희생, 노력, 고통을 안다. 이슬람에 대한 관리의 식민행정 메커니즘이 내무부 관할의 프랑스 무슬림 위원회(Conseil français du Culte Musulman)⁴⁹⁾의 구성으로 부활되었다. 차별적이고, 남성우월적, 인종주의적인 회갑착용 금지법은 식민주의의 냄새를 풍기는 특별법이다.

아르키(harkis)와 이들 자녀들 또한 식민적 차별과 격리의 대상이었다. 식민지 출신 그리고 이민출신 주민들은 또한 정치적 차별의 대상이었다. 드물게나마 선출직에 오른 일부는 “보르” 혹은 “흑인” 용역 역할에 국한되었다. “프랑스인”이 아닌 자들에게 투표권을 거부하고 또 “프랑스인이 된 사람”에게는 이들의 “뿌리”를 걸고 넘어졌다. 속지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48) 필자 번역.

49) 프랑스 이슬람위원회(Le Conseil Français du Culte Musulman)은 2003년 사르코지 내무장관의 주도로 성립한 프랑스 내 이슬람 대표협의체로 프랑스 정부의 대 이슬람 대화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박단, “현대 프랑스 사회의 무슬림 이민자와 세속화문제”, 249쪽 참조.

권리도 없고 보호도 받지 못하며 끝없는 체포와 추방의 위협 아래에서 수만의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동의 자유도 부정되고 있다 ; 점점 더 많은 (북)아프리카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프랑스는 식민국가였다...

4세기 동안 프랑스는 적극적으로 흑인노예 무역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주민들의 강제수용에 가담했다. 처참한 학살을 저지르며 식민 군대는 식민지의 자원을 빼앗고 피식민 주민들의 문화를 파괴하고 전통을 해치고 이들의 역사를 부정하고 기억을 지우면서 이들을 지배했다. 아프리카 출신 용병들은 양차대전에서 총알받이가 되어 여전히 불평등한 처우의 희생자로 남아있다.

... 프랑스는 여전히 식민국가이다

뉴칼레도니아,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귀안, 레위니옹, 폴리네시아에는 억압이 난무하고 보통선거가 무시되고 있다. 이들 식민지의 자손들은 프랑스 땅에서 이민자 내지 2급 프랑스인으로 취급받는다. 과거 식민지 중 일부에서 프랑스는 여전히 지배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지의 자원의 막대한 부분이 식민 본국과 국제자본에 흡수되고 있다. 프랑스 군대는 코트디부아르에서 정복군 행세를 하고 있다.

식민지 출신 주민에 대한 대우는 과거 식민지 정책으로 회귀되지는 않지만 그 연장선상에 있다. 법 앞의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법 자체가 여전히 평등하지 않다.(이중차별, (북)아프리카 출신 여성에 적용되는 ‘개인적 지위’⁵⁰⁾

“원주민”의 형상이 여전히 행정/사법 정책 안에 맴돌고 있다 ; 이 형상은 다른 억압, 다른 차별 및 다른 사회적 착취의 논리와 연결된다. 오

⁵⁰⁾ “개인적 지위”란 프랑스에 거주하는 북아프리카 출신 여성 중 이중국적자인 경우 그 여성의 민법적 지위는 프랑스가 아니라 출신국가의 법적용을 받는다는 원칙이다. 공화국의 원주민들은 이것을 프랑스의 식민잔재로 보고있으나, 일부는 알제리계 프랑스인들은 이를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으로 간주한다.

늘날 신자유주의는 고용불안정과 유연성을 임노동자 전체에게 확대하기 위해 이주 노동자들에게 노동시장의 탈규제의 역할을 맡기고 있다.

식민주의 암세포는 영혼에까지 퍼졌다. 중동지역에서 갈등이 격화되어 프랑스 사회의 논쟁에 즉각적으로 굴절된다. 미국 제국주의의 이해, 부시 행정부의 신보수주의는 여기에서 프랑스 식민 유산과 결합된다.

프랑스의 지식인, 정치권, 언론계의 일부 능동적인 인자들은 자임하던 진보적 투쟁에 등을 돌리고 부시의 “사상”을 전파하는 요원으로 변신했다. 이들 이데올로그들은 언론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명의 충돌” 테마를 프랑스 국내로 들여와 “공화국”과 “공동체주의”간의 갈등으로 부추기고 있다.

과거 식민시대의 영광의 시간처럼, 그들은 베르베르인과 아랍인을, 유대인과 “아랍-무슬림”, 흑인을 대립시키고 이간질시킨다. “이민출신” 청소년들을 이렇게 새로운 반유대주의의 전달자로 둔갑시킨다.

“근본주의”라는 모호한 명칭 아래, (북)아프리카 출신 혹은 무슬림 주민들은 이제 서양과 서양의 “가치”를 위협하는 새로운 야만의 꼬나풀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반동적인 공세는 비종교성(laïcité), 시민성, 페미니즘으로 위장하여 영혼을 빼앗고 정치적 지형을 재편한다. 이 공세는 프랑스 사회에서 재앙을 만들고 있다. 이미 이 공세는 진보 세력 내부에서도 자신의 논리를 암세포처럼 강요한다. 식민의 향수와 인종주의를 전적으로 극우파의 전유물로 간주하는 것은 정치적 역사적 기만행위이다. 식민 이데올로기는 프랑스 정치지형을 구성하는 주요 사상들을 관통하고 영속화되어 있다.

공화국의 탈식민화는 끝나지 않았다.

평등의 공화국은 신화에 불과하다. 국가와 사회는 자신의 식민지적 과거-현재에 대하여 근본적인 비판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프랑스는 자신의 계몽주의를 자문하고 대혁명 당시 공언한 평등주의적 보편주의 안에 “보편의 쇼비니즘”으로 뼈대를 갖추고 야만인을 “문명화”한다고 자부하는 프랑스 민족주의가 숨어있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취업, 주거, 문화, 시민성의 접근을 막는 인종주의적 차별을 종식시키는

정의와 평등의 근본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식민지 출신 주민들을 2등 국민의 지위로 취급하는 제도들을 종식시켜야 한다.

우리들의 부모와 조부모들은 노예상태에 처해졌고, 식민화 되었으며 동물취급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식민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영웅적인 저항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였다. 우리는 그들의 자손이며 나치의 야만에 저항하였던 프랑스인들의 자손이다. 우리는 또한 억압받는 자들 편에서 싸우면서 반식민 투쟁이 사회적 평등, 정의, 시민성을 위한 투쟁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참여와 희생으로 증명해온 모든 이들의 자손이기도 하다. 디엔베엔푸는 바로 이들의 승리이다. 디엔비엔푸는 패배가 아니라 자유, 평등, 박애의 승리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적, 식민적 혹은 신식민적 지배에 대항하여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민중(아프리카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이라크에서 체첸까지, 카리브에서 남미까지)의 편이다.

우리들, 노예의 후손이며 강제로 끌려간 아프리카인들의 후손, 피식민지인과 이민자들의 딸과 아들인 우리들, 프랑스 땅에 사는 프랑스인과 프랑스인이 아닌 이들, 후기 식민지적(la République post-coloniale) 공화국에 의해 생산된 억압과 차별에 대항한 투쟁에 참여한 운동원들인 우리들은 이 투쟁에 연루된 모든 이들이 진정 평등하고 보편적인 사회적 민주주의를 위한 모든 억압받는 이들과 착취받는 이들의 공동의 투쟁을 구축하기 위한 관점에서 프랑스의 정치 시스템과 행위자들, 그리고 그 너머로 프랑스 사회 전체를 따지고 물을 수 있는 독립적인 동력의 부흥에 이마지 할 수 있는 반-식민주의 운동을 여는 대 집회에 모이도록 이 호소를 내보낸다.

1945년 5월 8일, 공화국은 자신의 모순을 드러냈다 ; 프랑스 국민이 나치의 항복에 환영하는 축제를 벌이는 바로 당일 알제리 북부 콘스탄틴 지방에서 알제리 피식민 민중에 대한 전례없는 진압작전이 벌어져서 수천 명이 사망했다.

오는 5월 8일, 이 학살의 60주년을 기념하기위해 공화국 원주민들

이 준비한 최초의 시가행진을 통해 반식민 투쟁을 이어나가자!

2005년 1월 16일

Post-colonialism as Social Movement:
the case of "indigenes of Republic" in France

Kim Tae Soo

In France, 2005 might be recorded as “the year of post-colonialism” after emergence of “indigenes of Republic” in January, legislation of “23th Feb. law” in which “positive roles” of French colonization is clearly stated, and last but not least, vast and violent riots which broke out in many suburb zone(banlieue) in French territories. Since 2005, themes related to French colonial past, in company with post-colonial discourses, return on the front stage of public debate in France. In this article, focusing on *Mouvement des indigènes de la République(MIR)*, we will try to reconstitute debates around post-colonialism in France and their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Specifically, historical background of MIR will be enlightened via process of establishment of “immigrant youth movement” and its differentiation, also situational context will be highlighted through the rampant “Islamophobia” in French society after the September 11 attack. And after describing the social context in which post-colonial perspectives immerse as a new ideological frame for immigrant youth movement, and analysing its activity style, we will conclude this article by pointing out some limits and significations of this “post-colonial movement” in French contemporary society.

Key words: France, indigenes of Republic, post-colonialism, social movement, colonial past